

## 서남대 폐교 수순 밟나... 도내 곳곳 반발

교육부, 구조개혁 추진 따라

정상화 추진위 "지역 인재들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조금이나마 막아주길" 밝혀

도내 국회의원 8명 "대통령·교육부 규탄"

교육부 "폐교될 경우에도 횡령액 바로 환수도록 할 것"

교육부가 사학비리로 사회적 문제가 된 남원 소재 서남대학교에 대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기로 방침을 정하자 전북도내 각계각층이 반발하고 나섰다.

또 '학교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전북 정치권과 행정, 시민단체 등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2일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수용하지 않으며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가 즉각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먼저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남원이, 전북이 나후했기에 새로운 대학을 설립해달라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그저 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학이 학교 설립자의 비리로 인해 사라지고,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2일 서울시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서남대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위원회는 "남원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학이 학교 설립자의 비리로 인해 사라지고,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가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막아주길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남대는 나후된 지역의료로 인해 고통받는 지리산권 주민들이 사립대학을 살기위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준 곳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상생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학비리로 폐교하게 되더라도 그 재산이 온전히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옮겨진다는 규정은 정부에서 사학비리의 가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도내 정치권도 이번 교육부의 결정

에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7명의 국민의당 소속 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전북 민심과 학생들을 외면한 대통령과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대학 구성원과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열의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재정기여자의 횡령금 우선변제라는 자의적인 원칙에 얽매어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파행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학생과 교수, 학부모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과 학생, 전북 지역사회의 피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며 "전북의 민심을 외면한 문제인 대통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북도와 남원시도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파행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학생과 교수, 학부모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과 학생, 전북 지역사회의 피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며 "전북의 민심을 외면한 문제인 대통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북도와 남원시도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 농장간 이동시  
결핵 검사증명서 휴대

전북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전국으로 거래되는 소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와 검사 증명서 휴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장간 거래되는 소를 통해 결핵병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에 대해서 결핵병 검사를 받게 하는 정책이다.

또한,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거래일 21일 전까지 관할 시·군청에 결핵병 검사 신청을 하고, 검사결과확인 후 거래해야 하며, 검사 실시 여부와 결과는 인터넷(최고기이력제 홈페이지, 스마트폰(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증명서 미휴대 등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성 기자

환경녹지분야 도시사  
공약사업 추진 '양호'

도, 추진상황 보고회서  
11개 사업 중 6개 '완료'

전북도는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 환경녹지분야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 3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출범이후 약 3년여 기간 동안의 공약 이행 실적으로 54.9%가 이행완료됐고, 81.8%가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민선 6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약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2일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현승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고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약사업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부안 죽막동 유적(扶安 竹幕洞 遺蹟)'이 2일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변산반도의 돌출된 서쪽 끝 해안절벽 위에 있는 부안 죽막동 유적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해상 교류의 중요한 길목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배길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해양 제사가 행해져 오고 있다.

1992년 발굴조사에서 백제, 가야, 통일

###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문화재 사적 지정

고대 제사 흔적 그대로 보존돼

신라부터 조선, 중국,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유물(제사용 토기, 금속유물, 토제·석제 모제품, 중국 도자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의 것으로, 중국·일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제의에 참여했고 제사가 끝나면 제기를 포함한 각종 물품을 땅에 묻었음을 확인했다.

부안 죽막동 유적은 해안 절벽 위에서 △고대의 원시적인 제사 흔적이 그 문화경관과 함께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해양 제사 문화의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에도 개양할미의 전설이 이어지고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가 매년 열리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안=이옥수 기자



국립세종시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